

제 18기 중견리더과정

저출산 · 고령화 대응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요약

한국은 서구사회에서 100년에 걸쳐 진행된 인구구조 변화를 유례없는 빠른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1명 미만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초저출산 현상을 나타내며, 83.3세의 높은 기대수명을 나타내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1958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은퇴 연령 시기가 도래하면서부터 기존 인구구조의 통계자료 기초하여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계속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국가 성장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데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의료보험 · 국민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등 보건 · 복지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일정 범위에서 예측가능하고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시차를 두고 일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 고령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해외 주요국 대응방안을 연구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주제어: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 고령화, 사회보장제도

목 차

I.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II.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실태	5
1. 저출산 현황	5
2. 고령화 현황	7
3. 인구문제 전망과 위험 요인	9
III.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및 노후소득 여건	14
1.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영역과 추진과제	14
2. 65세 이상 인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의 공적·사적연금 수급실태	15
3.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16
IV. 해외 주요국의 대응방안	17
1. 프랑스	17
2. 스웨덴	18
3. 영국	19
4. 일본	20
5. 독일	21
6. 헝가리	22
V. 저출산 고령화 대응 개선방안	24
1. 저출산 대응 개선방안	24
2. 고령화 대응 개선방안	25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 수준이었으나, 1983년 인구 대체수준(2.1명) 이하인 2.06명을 기록하였고, 2019년 합산 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산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 합산 출산율 0.9명대는 다른 나라와 비교시 상당한 격차로 OECD 평균 1.63명 (2018년)으로 저출산·고령 사회로 심각한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2017년도 이미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4%가 넘어 국제기준에 따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한국 전체의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이상 넘어 국제기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노년기 연장과 함께 경제, 교육, 노동, 보건의료, 복지 등 다양한 사회운영시스템 전 영역에서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변동과 사회 변동 간 상호 작용은 중층적으로 작용하여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최근 고령화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교육 현장에서 신입생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정원 미달로 지방대학의 전공학과 통폐합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간의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에는 노인 빈곤 문제,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등이 있다. 특히 노인 빈곤에서 벗어나서 노년의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가 어떻게 보장하며, 점점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도전 이루어지고 있다. 1958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은퇴 연령 시기가 도래하면서 신중년의 중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와 차이를 촉발하여 확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시장, 전통적 연금과 건강보험 등 노후보장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 작동 시스템의 작동, 운영 방식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능동적 역할에 주목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어젠다와 대응정책의 경향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담론을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가의 대응 사례 비교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을 선행연구보고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앞서 경험한 국가들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 및 정책보고서를 통해 독일, 핀란드, 일본의 각국의 고령사회 대응 사례를 살펴본 연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국제기구의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이나 EU의 활동적인 노화, 유럽 국가들의 활동적인 노후 정책 관련하여 정책 대응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대응 개혁 전략을 검토 분석하는 것을 핵심방향으로 한다.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담론을 검토하고,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확인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에서의 핵심기준에 기초하여 주요 선진국의 대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용할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국제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관련 공식적인 문헌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분석에는 다양한 정기 간행물, 정책 보고서, 연구논문, 언론 보도자료 등이 활용된다.

둘째, 1982년 제1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채택 ‘고령화 관련 행동계획’ 이후 발표된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관련 공식문서를 분석한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과 고령화 대응정책 개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넷째,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 및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한다.

II.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실태

1. 저출산 현황

가.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 수준이었으나,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0년 4.53명에서 2.0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다. 2001년 합산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수준에 도달하였고, 최근까지 [표 1]와 같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에는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19에는 0.92명까지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2017년 OECD 평균 1.65명)이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초저출산 현상이 2001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표 1]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2009~2019년)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 당 명)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전년 대비	증감	△0.043	0.077	0.018	0.053	△0.11	0.018	0.034	△0.067	△0.12	△0.075	△0.059
	증감률(비율)	△3.6	6.7	1.5	4.3	△8.5	1.5	2.8	△5.4	△10.2	△7.1	△5.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특히,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표 2]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매우 가파르게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하락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변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2]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65~2015년)

(단위: 명)

구분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한국	5.6	4.0	2.2	1.7	1.5	1.2	1.2	1.2
독일	2.5	1.7	1.5	1.3	1.3	1.4	1.4	1.4
일본	2.0	2.1	1.8	1.5	1.4	1.3	1.3	1.4
프랑스	2.8	2.3	1.9	1.7	1.8	1.9	2.0	2.0
이탈리아	2.5	2.3	1.5	1.3	1.2	1.3	1.4	1.4
영국	2.8	2.0	1.8	1.8	1.7	1.7	1.9	1.9
스위스	2.6	1.9	1.5	1.5	1.5	1.4	1.5	1.5
스웨덴	2.3	1.9	1.6	2.0	1.6	1.7	1.9	1.9
스페인	2.8	2.9	1.9	1.3	1.2	1.3	1.5	1.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나. 출생아 수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 수는 [표 3] 및 [도표 1]과 같이 1970년대 초반에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다가 지속적인 산아제한 정책과 저출산 현상 등에 따라 계속 감소하였고, 2006년 45.2만 명에서 2012년 48,5만 명으로 잠시 반등하였으나, 2019년 다시 30.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3] 연도별 출생아 수의 변화 추이(1970~2018년)

(단위: 명)

연도	출생아 수	연도	출생아 수	연도	출생아 수	연도	출생아 수	연도	출생아 수
1970년	1,006,645	1980년	862,835	1990년	649,738	2000년	640,089	2010년	470,171
1971년	1,024,773	1981년	867,409	1991년	709,275	2001년	559,934	2011년	471,265
1972년	952,780	1982년	848,312	1992년	730,678	2002년	496,911	2012년	484,550
1973년	965,521	1983년	769,155	1993년	715,826	2003년	495,036	2013년	436,455
1974년	922,823	1984년	674,793	1994년	721,185	2004년	476,958	2014년	435,435
1975년	874,030	1985년	655,489	1995년	715,020	2005년	438,707	2015년	438,420
1976년	796,331	1986년	636,019	1996년	691,226	2006년	451,759	2016년	406,243
1977년	825,339	1987년	623,831	1997년	675,394	2007년	496,822	2017년	357,771
1978년	750,728	1988년	633,092	1998년	641,594	2008년	465,892	2018년	326,822
1979년	862,669	1989년	639,431	1999년	620,668	2009년	444,849	2019년(잠정)	303,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도표 1]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1970~2018년)



자료: 통계청

다. 혼인건수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007년 35만건 아래로 떨어진 이후 [표 4]과 같이 2011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23만 9,159건으로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표 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의 변화 추이(2009~2019년)

(단위: 천 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혼인건수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264.5	257.6	239.2
증감	△18.0	16.3	3.0	△2.0	△4.3	△17.3	△2.7	△21.2	△17.2	△6.8	△18.5
증감률	△5.5	5.3	0.9	△0.6	△1.3	△5.4	△0.9	△7.0	△6.1	△2.6	△7.2
조혼인율 ^{주)}	6.2	6.5	6.6	6.5	6.4	6.0	5.9	5.5	5.2	5.0	4.7

주: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CMR)은 1년 동안에 발생한 혼인건수를 해당연도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지표

자료: 통계청

평균 초혼연령은 [도표 2]와 같이 2019년 기준으로 남성은 33.4세, 여성은 30.6세로 남녀가 모두 2018년에 비해 0.2세 상승하였다. 10년 이전과 비교하면 남성 1.8세, 여성 1.9세가 각각 상승하는 등 만혼 현상도 심화 되고 있다.

[도표 2] 초혼 연령별 혼인건수 및 평균 초혼연령



자료: 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 통계

한국 사회의 빠른 환경 변화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가족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상당 부분 약화되어 결혼을 형식이나 규범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미혼남녀의 비혼화와 만혼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고령화 현황

가. 고령인구수 및 고령화율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 지표를 통해 한 국가의 고령화 수준을 파악한다. 유엔은 고령화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하며,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사회는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중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표 5]와 같이 2017년 707만 명이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 인구수가 매년 급증하여 2025년에는 1,000만 명(1,051만 명, 20.3%)을 넘고, 2050년에는 1,901만 명(39.9%)까지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5] 고령인구수 및 고령화율 예측(2017~2067년)^{*)}

(단위: 만 명, %)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2055년	2060년	2067년
총인구	5,136	5,178	5,191	5,193	5,163	5,086	4,957	4,774	4,541	4,284	3,929
65세 이상 고령 인구	707	813	1,051	1,298	1,524	1,722	1,833	1,901	1,881	1,881	1,827
고령화율	13.8	15.7	20.3	25.0	29.5	33.9	37.0	39.8	41.4	43.9	46.5

주: 중위 추계 시나리오를 가정한 수치임. 장래의 인구추계는 미래 인구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별 장래수준을 고위, 중위, 저위로 가정하는데 고위는 높은 수준의 출산율, 기대수명, 국 제이동을 조합하고, 저위는 낮은 수준의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을 조합하며, 중위는 고위와 중위의 중간 수준으로 가정함
자료: 복지부, 2019 인구정책 통계집

나.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의 변화 추이

앞으로의 고령화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노령화지수[Aging index, 유소년인구(0~14세) 100 명당 고령인구수]는 [표 6]과 같이 2017년 105.1명에서 2067년 574.5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수]도 2017년 18.8명이 2067년 102.4명 수준으로 2017년 대비 5.5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고령 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표 6]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의 추이 및 예측(1970~2067년)

(단위: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7년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67.2	105.1	129.0	259.6	345.7	447.2	546.1	574.5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4.8	18.8	21.7	38.2	60.1	77.6	91.4	102.4

자료: 복지부, 2019년 인구정책 통계집

다. 노인빈곤율의 변화 추이

인구 고령화의 점진적인 진행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재정수지 악화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둔화하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 고령층의 빈도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노인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65세 이상) 비율인 노인절대빈곤율과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의 비율인 노인상대빈곤율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 노인빈곤율은 노인상대 빈곤율(이하 “노인빈곤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표 7]와 같이 2018년 기준 42.0%로 2008년 이후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7] 노인빈곤율 현황(2008~2018년)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4.1	45.9	46.3	47.6	47.2	48.1	47.4	44.8	46.5	42.3	42.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 2018년)

3. 인구문제 전망과 위험 요인

가. 인구구조의 변화 예측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표 8]과 같이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17년 5,136만 명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1982년 수준)이 될 전망이다.

[표 8] 총인구의 변화 예측(1960~2067년)

(단위: 만 명, %)

시나리오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7년	2020년	2028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7년
중위	2,501	3,224	3,812	4,287	4,701	5,136	5,178	5,194	5,193	5,086	4,774	4,284	3,929
고위						5,136	5,194	5,316	5,341	5,355	5,161	4,808	4,547
저위						5,136	5,164	5,091	5,065	4,831	4,401	3,801	3,365

자료: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그런데 이러한 중위 추계 수준의 합산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표 9]와 같이 2067년에는 생산 연령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45.4%이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6.5%이고, 유소년인구

(0~14세)는 8.1%를 차지하여 고령 인구수가 생산연령인구수 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연령계층별 인구수 및 구성비율의 추계(2017~2067년)

(단위: 만 명, %)

연령	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7년
계	5,136	5,178	5,193	5,086	4,774	4,284	3,929
0~14세(구성비율)	672(13.1)	630(12.2)	500(9.6)	498(9.8)	425(8.9)	345(8.0)	318(8.1)
15~64세(구성비율)	3,757(73.2)	3,736(72.1)	3,395(65.4)	2,865(56.3)	2,449(51.3)	2,058(48.0)	1,784(45.4)
65세 이상(구성비율)	707(13.8)	813(15.7)	1,298(25.0)	1,722(33.9)	1,901(39.8)	1,881(43.9)	1,827(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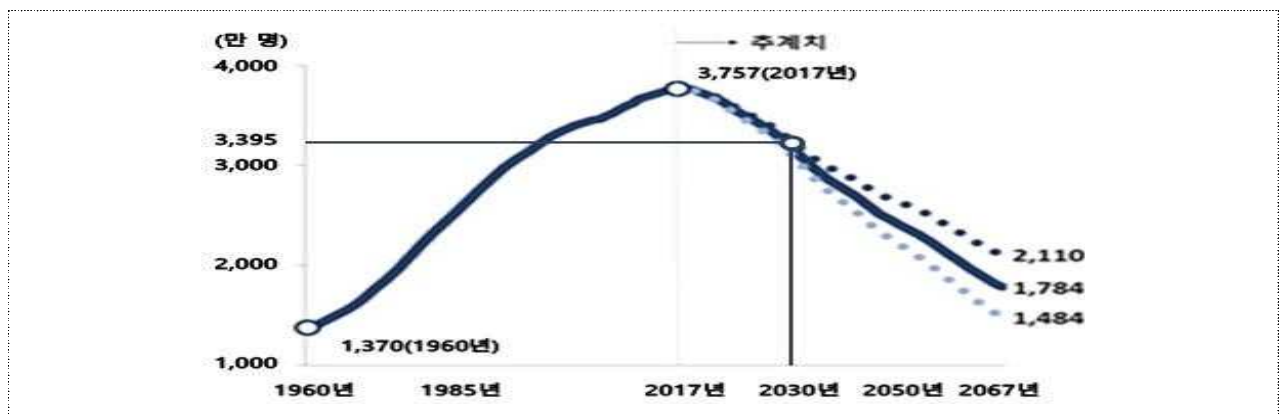
주: 통계표의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하 같은 자료: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나.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

1)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의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도표 3]과 같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표 8]과 같이 2017년 3,757만 명(전체 인구의 73.2%)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어 2030년대에는 3,395만 명, 2067년경에는 1,784만 명(중위 추계 가정, 전체 인구의 45.4%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도표 3] 생산연령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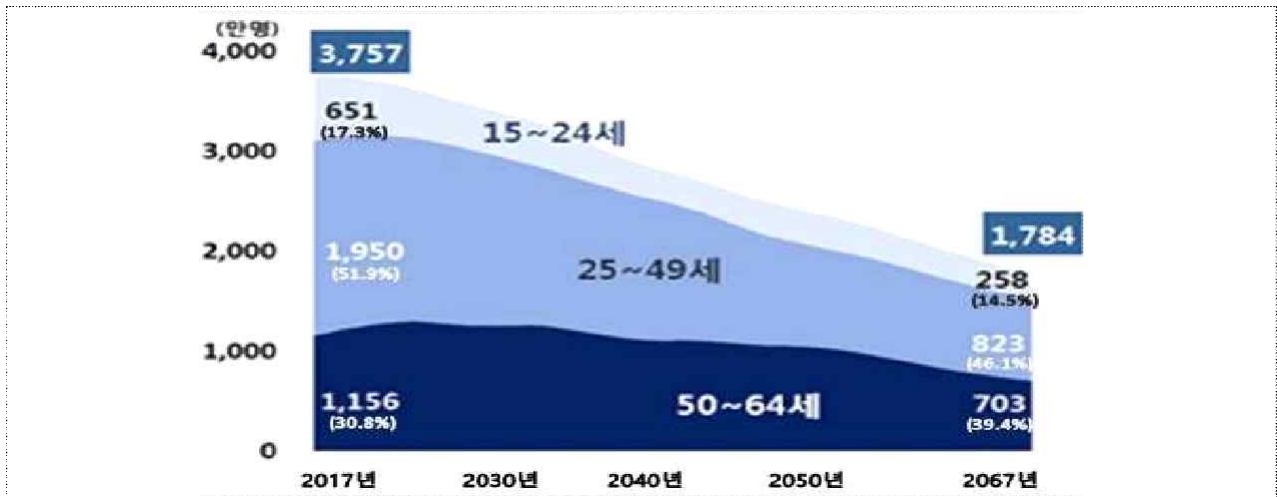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특히, 생산연령인구 중 연령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도표 4]와 같이 15~24세의 인구 비중은 2017년 17.3%(651만 명)에서 2067년 14.5%(258만 명)로 감소하고,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의 인구 비중은 2017년에 51.9%(1,950만 명)에서 2067년에 46.1%(823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 되며 반면에, 50~64세의 인구 비중은 2017년에 30.8%(1,156만 명)에서 2067년에 39.4%(7

03만 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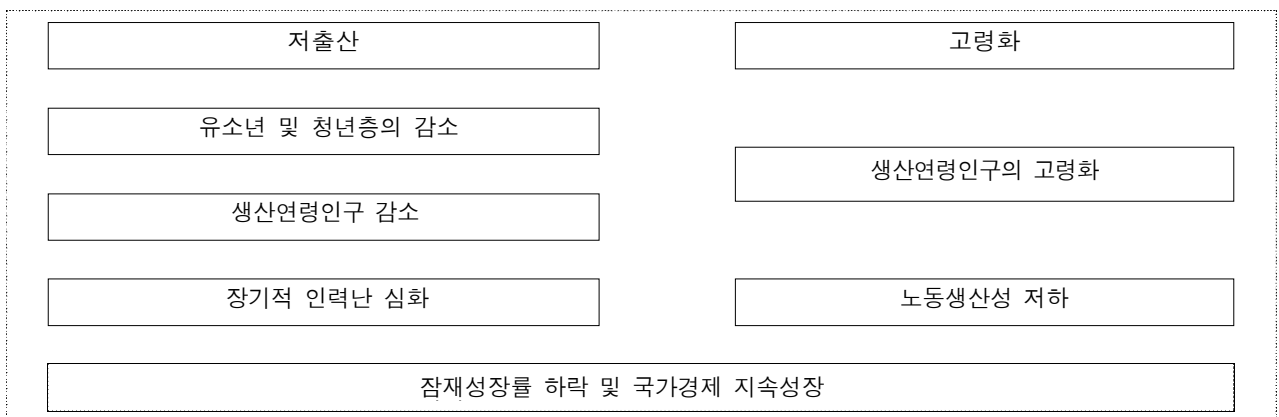
[도표 4] 생산연령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및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이와 같은 인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그림 2]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인력난의 심화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림 2]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료: 감사연구원,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시사점”(2019년)

2) 학령인구, 병역의무자, 지역인구의 감소

인구 저출산의 영향은 학령인구(6~21세)의 감소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학령인구가 [표 10]와 같이 2017년 846만 명에서 2067년 364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 과잉이 발생하고, 대학 입학자원감소로 인한 미충원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10] 학령인구수 변화 예상(2017~2067년)

(단위: 만 명)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2055년	2060년	2067년
합계	846	782	689	608	548	520	529	507	465	419	364
초등학생(6~11세)	272	272	233	180	200	208	191	173	160	140	125
중학생(12~14세)	138	136	140	114	87	102	104	94	86	79	65
고등학생(15~17세)	172	138	136	132	96	92	105	100	90	83	71
대학생(18~21세)	264	236	180	181	166	119	129	140	129	116	104

자료: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병역의무자는 2020년출산 33.3만 명에서 2025년 22.6만 명으로 감소하고, 2037년 이후에는 19만 명 이하로 급감하여 향후 병력자원 감소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하여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2019년 기준 228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97개 시·군·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및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수입 규모는 감소하고, 보건·복지 분야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분야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표 11]과 같이 2018년 6.9%에서 2060년에는 23.8%로 증가하여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 지출의 GDP 대비 비중 및 구성비율

(단위: %)

구분	2018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사회보험 분야	GDP 대비 비율	6.9	7.7	11.4	15.8	23.8
	공공사회복지 대비 비율	62.2	63.9	70.2	75.7	83.1
일반재정 분야	GDP 대비 비율	4.2	4.4	4.9	5.1	4.8
	공공사회복지 대비 비율	37.8	36.1	29.8	24.3	16.9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비율		11.1	12.1	16.3	20.8	28.6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19년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표 12]와 같이 2014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Delta 123.9$ 조 원)될 것으로 추계되었고, 2013년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할 때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국민연금 적립기금 변화 추이(2018~2057년)

(단위: 조 원)

2018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2055년	2057년
671.4	780.6	1,078.7	1,378.5	1,641.9	1,776.3	1,673.9	1,244.3	385.0	$\Delta 123.9$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2017년 기획재정부의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에서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2023년경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 전망한 바도 있다.

Ⅲ.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및 노후소득 여건

1.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영역과 추진과제

제3차 기본계획을 보면 [표 13]과 같이 저출산 대책은 크게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령화 대책은 노후소득보장, 활기차며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중고령자·외국인 인력의 활용 확대,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13]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추진 영역별 주요 추진 과제

분야	추진 영역	주요 과제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공교육의 역량 강화 및 사교육 부담경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다문화 가정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확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령화 대책	노후 소득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연금 강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준비 여건 확충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 관광산업 및 식품산업 육성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자료: 제3차 기본계획 재구성

그리고 2016년부터 2 영역별 예산은 [표 14]과 같은데 고령화 대책 분야는 노후 보장 강화 영역에서 예산의 77.2%(35조 6,596억 원)를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득보장 강화 여역 중 공적연금 강화(35조 1,412억 원)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표 61] 최근 3년간(2016~2018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추진 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분야	추진 영역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합계		326,549	366,007	450,549	1,143,105
저출산 대책	소계	187,397	216,234	277,346	680,977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26,590	27,385	80,592	134,567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141,374	161,917	168,502	471,793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12,137	14,083	24,233	50,453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7,296	12,849	4,019	24,164
고령화 대책	소계	139,152	149,773	173,203	462,128
	노후 소득보장 강화	110,395	115,347	130,854	356,596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21,310	25,878	32,096	79,284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4,920	5,338	5,510	15,76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2,527	3,210	4,743	10,480

주: 연도별 최종예산 기준

자료: 2016~2018년 중앙부처 성과평가 재구성

2. 65세 이상 인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의 공적·사적연금 수급실태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수급비율을 보면, [표 13]과 같이 국민연금의 경우 43.54%인데 퇴직연금, 농지연금 및 주택연금의 경우 각각 0.86%, 0.1%(2018년 기준) 및 0.63%로 나타났다.

[표 13]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의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가입 또는 지원대상	수급 기준	소관 부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수급자 수 (월평균 수급액)	인구대 비 수급률 ^{주1)}	수급자 수 (월평균 수급액)	수급자 수 대비 수급률
3층	주택연금	부부 중 1인이 만55세 이상,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가입 즉시	금융위원회	50,308 (1,593천 원)	0.63	40,588 (872천원)	0.76
	농지연금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	가입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8,118 (903천원)	0.10	3,510 (814천원)	0.06
	개인연금	일반 국민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금융위원회	통계 미보유	통계 미보유	116,412 (172천 원)	2.18
2층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부터 수급 가능	고용노동부	68,907명 ^{주2)} (4,832천 원)	0.86	1,843 (971천원)	0.02
1층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0세	복지부	3,414,256 (505천 원)	42.54	2,123,069 (284천 원)	39.90
0~1층	기초연금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		복지부	5,324,372 (237천 원)	66.33	좌동	100
0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복지부	통계 미보유	통계 미보유	616,899	11.59

주: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026,915명임
 2. 퇴직연금은 2018년 기준
 자료: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 정보(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 분석Ⅱ),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 정보(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복지부 제출 자료)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른 종류의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을 살펴 보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39.9%이나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0.02%, 개인연금 2.18%, 농지연금 0.06%, 주택연금 0.76%로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적연금의 가입률이 낮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인데,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자의 51.3%가 가입되어 있으나 [표 14]와 같이 2018년 만 55세 이상의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97.9%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고 있었다.

[표 14] 퇴직급여 수령 유형별 현황

(단위: 개, 억 원, %)

구분	연금수령		일시금 수령		합계	
		비중		비중		비중
계좌 수(A)	6,145	2.1	290,227	97.9	296,372	100.0
금액(B)	12,643	21.4	46,359	78.6	59,002	100.0
계좌당 금액(B/A)	2.06	-	0.16	-	0.20	-

자료: 금융감독원,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2019년)

3.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 등으로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1.3%(2018년)로이고 OECD 평균(15.1%)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 80세 이전까지는 근로 및 사업 활동이 노인생활비의 주요 수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와 같이 고령층 본인(배우자 포함) 부담으로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방법은 65세 이상 69세 이하는 근로·사업소득 57.7%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79세 이하 경우도 근로·사업소득이 43.1%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0세 이상은 연금·퇴직급여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5] 65세 이상의 생활비 마련 방법(본인 및 배우자 부담)

(단위: %)

나이	근로·사업소득	연금·퇴직급여	재산소득	예금(적금)
65~69세	57.7	26.9	9.4	6.0
70~79세	43.1	34.1	14.9	7.9
80세 이상	27.5	43.1	16.3	13.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9년 기준) 재구성

IV. 해외 주요국가의 대응방안

1.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 정부는 출산에 관한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한 결과, 1994년 1.66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8년에 1.84명으로 회복되었는데 주요 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족정책 및 수당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유치원에서는 무상교육을 하고 3~5세 아동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보육 및 가정 내 보육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자녀가 있는 가정 에 가족수당, 가족 보조금, 영아양육수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임신 6개월 이후부터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를 모두 100% 국영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등의 제도가 있다.

나.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구축

프랑스는 시간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한 근무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여성이 출산 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프랑스 여성(25~54세)의 경제 참가율은 83.1%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법적 권리로 부여하는 등 남성이 육아와 가사 활동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프랑스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혼외출산아와 동거인에게도 법률혼과 동등한 보조금, 사회보장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스웨덴의 사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에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 기준 1.56명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2018년 기준 1.75명으로 회복되었는데 주요 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녀수당 등 각종 보조금

1948년부터 지급된 자녀수당은 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해당 아동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되고, 지급액은 일반봉급자 급여의 13% 수준(OECD 18개국 평균 7~8%)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2011년 기준 170만 명의 스웨덴 아동이 매월 17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전체 예산의 3%, 가족복지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업보조금은 아동이 만 16세가 되면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50크로네(약 106만 원)가 학기 중인 8개월 동안 지급되는 등 국가보조금이 중단 없이 지급되어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나. 부모보험 제도

1978년 시작된 부모보험 제도는 출산휴가, 간병휴가, 임신수당 및 출산터울 혜택 등이 포함된 스웨덴의 독특한 사회보장 제도로써 2011년 스웨덴 전체 예산의 4.2%, 가족복지예산의 47%에 해당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휴가 기간이 197년 180일로 시작하여 2002년 480일(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쌍둥이의 경우 180일 추가 가능)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부모가 나누어 6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출산휴가 수당은 부모보험에서 월평균 소득의 약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간병휴가는 12세 이하 아동이 아픈 경우에 부모가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간병휴가 수당은 부모보험에서 월평균 소득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임신수당은 1980년 육체근로자를 위해 최초 도입된 후 1985년 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제도로써 임신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최대 50일간 근로수당의 80%가 지급된다.

출산터울혜택은 여성이 출산한 뒤 30개월 이내에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 직전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월급만큼은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첫째 자녀 출산과 둘째 자녀 출산 사이에 육아휴직, 이직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적

어졌더라도 첫째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월급에 맞추어 부모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사이의 터울을 줄여 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다. 공교육 및 공교육 인프라 확충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시설에 투자하여 전체 보육시설의 80%가 공공보육시설이고, 민간시설도 공공보육시설과 동등한 지원을 받으며, 어린이집, 자유 유치원, 시간제 유치원 및 가정보육 등의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학교, 패밀리홈 등 교육서비스를 부모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라. 이민정책

스웨덴은 외국 이주민에게도 내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다문화 포용정책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펼친 결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무슬림 이민 여성이 평균 3.5명의 아이를 낳고 있어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영국의 사례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에는 가족정책에 있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화하여 2000년에 1.7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에는 1.87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1.68명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가. 경제적 지원 정책

영국은 2004년에 ‘10년 보육전략’ (10-year Strategy for Childcare)을 수립하여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고, 가족세액공제제도(1999년), 자녀세액공제제도 및 근로세액공제제도(2003년) 도입하여 부부와 자녀가 없는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의 자녀를 가지거나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나. 비공식적인 양육지원 혼외출산자 무차별 정책

영국은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비공식적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동거가족의 자녀 등 혼외출산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없이 결혼 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여 동거가족이 아이를 낳는 데 부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 일·가정 양립 정책

영국은 2006년도에 「일·가정 양립법」(Work and Families Act) 제정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 및 유급 모성휴가의 확대(39주), 출산 후 1년간 휴직 가능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였고, 만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탄력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주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라. 이민정책

비영국 출신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아는 영국 전체 출생아 중 비율이 2001년 15%에서 24%로 지속 상승하여 영국의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국 출신 여성이 결혼·출산이 활발한 연령층에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고, 합계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4. 일본의 사례

일본은 1990년대에 양육·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결혼·양육 지원정책과 남녀 공동 일하기 방식 개혁 등의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2005년 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18년 1.42명으로 상승하였다.

가. 주요 정책수단

일본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출산, 육아, 간호휴직제도 및 경제적 지원책인 아동수당이라 할 수 있다. 출산휴직은 출산 전에 6주, 출산 후에 8주 총 14주간 가능한데 휴직 기간 중 급여는 원래 급여의 67%가 지급되고 있다. 유가휴직은 1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휴직 기간 중 급여는 180일까지는 원래 급여의

67%(월 426,000엔 상한, 약 452만 원), 그 후에는 180일까지, 약 226 지급된 급여의 50% (월 213,000엔 상한, 약 226만 원)가 지급되고 있다. 간호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년간 5일, 자녀가 2인 이상이면 10일까지 가능한데 휴직 기간 중 급여는 67%가 지급되고 있고, 아동수당은 자녀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3세 미만은 월 15,000엔(약 16만 원)이 지급되는 등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그 외에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세액 공제 및 과세 공제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이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나. 이민정책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지 단일민족주의를 공식 견해로 내세웠으나 2000년대 이후 다문화 공생을 표명함에 따라 2010년 이후 간병, 가사 및 육아 등의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8년에는 단순 노동자의 일본 유입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5. 독일의 사례

독일은 2000년대 이전에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정책을 주요 내용이었으나, 최근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합계출산율이 1995년 1.3명에서 2018년 1.57명으로 회복되었다.

가. 경제적 지원책과 노동정책

독일은 이른 시기부터 ‘가족 부담 조정’을 목표로 아동수당과 세액 공제 등 제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실시하다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정책은 1980년이 되어서야 시작하였다.

출산휴직은 출산 전에 6주, 출산 후에 8주 총 14주(쌍둥이의 경우 12주 연장) 가능한데 휴직기간 중 급여는 원래 급여의 전액이 지급되고 있고, 육아휴직은 3년 가능하되 휴직기간 중 급여는 1년간 65%가 지급되고 있다. 간호휴직은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1년간 10일, 자녀가 3인 이상이면 25일까지 가능한데 휴직 기간 중 급여는 80%가 지급되고, 아동수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첫째와 둘째는 월 192유로(약 25만 원), 셋째는 월 198유로(약 26만 원), 넷째 이상은 223유로(약 30만 원)가 지급되고 있다.

나. 보육정책

독일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5년 「보육정비법」과 2007년 「아동지원법」을 제정해 3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보육원을 늘려 가정 외의 인가된 보육시설 이용률이 1992년 2%에서 2014년 32.2%로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모의 노동시간에 맞는 개원·근무시간 조정과 놀이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5. 헝가리의 사례

헝가리는 낮은 출산율과 서유럽으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만자 수용이 아닌 헝가리 인구 증가로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가족지원 예산을 2010년 대비 2배 증가(2020년 헝가리 전체 예산의 5%)하는 등 강력한 결혼·출산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가. 가족보호 액션플랜

2019년 7월부터 부부가 대출 이후 5년 이내 자녀 출산을 약속하는 경우 3만 유로(약 3,977만 원)를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자녀 예상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융자를 받은 뒤 상환기간 동안 2자녀를 출산하면 상환기간 3년 연장해주고 상환액도 30% 감면해 주며, 3자녀를 출산하면 상환액을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주택 구매시 2자녀 가정은 최대 3만 유로, 3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4만 5,000유로(약 5,966만 원)를 융자(이자율 3%)해 주고 있고,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 지원 대상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3자녀 이상 가족이 7인승 이상의 신차를 구매할 때에는 7,800유로(구입액의 50% 한도, 약 1,034만 원)를 지원하고, 4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소득세(15%)를 전부 면제해 주고 있다.

나. 기타 가족지원 제도

헝가리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과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하고 있고,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양육 자녀 수에 따라 현금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 여성이 은퇴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가족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육아·노약자 돌봄 등을 분담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대응 사례와 같이,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출산·양육이 공공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하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표 16]와 같이 출산율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24] 해외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및 인구구조 등 추이

(단위: 명, %, 만명)

국가명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프랑스	합계출산율	2.65	1.86	1.80	1.76	1.88	1.98	1.98	1.84
	15~49세 비율	48.0	48.8	50.3	48.8	47.2	45.4	43.5	-
	인구수	5,076	5,387	5,667	5,902	6,112	6,288	6,445	-
스웨덴	합계출산율	2.17	1.66	1.91	1.56	1.67	1.89	1.90	1.75
	15~49세 비율	46.9	46.8	49.0	45.6	45.7	46.3	45.2	-
	인구수	806	832	857	888	904	939	977	-
영국	합계출산율	2.57	1.73	1.84	1.74	1.66	1.86	1.87	1.68
	15~49세 비율	45.2	47.3	49.6	47.8	48.3	47.7	46.0	-
	인구수	5,557	5,621	5,713	5,892	6,029	6,346	6,586	-
일본	합계출산율	2.04	1.83	1.65	1.37	1.30	1.34	1.41	1.42
	15~49세 비율	56.5	52.8	51.5	47.1	44.8	43.4	42.0	-
	인구수	10,493	11,782	12,451	12,752	12,833	12,854	12,799	-
독일	합계출산율	2.36	1.51	1.43	1.35	1.35	1.36	1.43	1.57
	15~49세 비율	46.7	50.5	50.3	48.8	48.3	46.2	43.5	-
	인구수	7,858	7,828	7,905	8,140	8,160	8,083	8,179	-
헝가리	합계출산율	1.98	2.25	1.82	1.38	1.30	1.33	1.33	1.49
	15~49세 비율	51.6	48.0	49.0	50.3	49.0	47.8	47.7	-
	인구수	1,037	1,075	1,038	1,022	1,009	993	978	-

주: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보고서의 인구구조 자료는 5년

단위로 제공 자료: 통계청 및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9) 자료

V.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정책 개선방안

1. 저출산 대응정책 개선

가.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출산·양육이 공공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하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가족수당, 가족 보조금, 영아양육수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밖에도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를 국영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등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나. 교육 및 보육 인프라 확충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자유 유치원, 시간제 유치원 및 가정보육 등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학교, 패밀리홈 등 교육서비스를 부모의 처한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교육 및 공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다. 일·가정 양립 문화 구축

여성이 출산 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며,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법적권리로 부여하는 등 남성이 육아와 가사 활동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여성이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출산·양육이 공공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하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구축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2. 고령화 대응정책 개선

가.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OECD는 연금개혁을 목표로 의무가입과 임의 가입대상을 모두 확대하고, 소득의 적절성을 갖추어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되도록 하고 한편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부담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 및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하여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도록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

나. 고령자 고용

첫째,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산업, 노동 수요 공급의 특성이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지역별로 현장을 잘 아는 주체가 주도하여 각자 고령자 고용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 노동자의 재교육, 보충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재상황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고령자 빈곤율 감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환경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고령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 의료 및 장기요양

OECD는 최근 ILO와의 공동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 분야가 미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주요 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장기요양 분야의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므로, 정부의 예산확보, 빈곤의 위험 없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험적용, 사회보장체계와 같은 메카니즘의 구축, 장기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임금 개선, 적정 근무시간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효율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테크놀리지의 사용등을 들 수 있다.(ILO & OECD, 2019).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인구 고령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금 및 소득보장, 고용, 장기요양, 등을 생애주기별(Life Course Approach) 관점을 기반으로 노인인구의 생산성 및 가능성에 집중한 다양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제이 외(2020). 「노인빈곤을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외(2020).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래 외(2020).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양성과 사회정책적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보혜 외(2019).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외(2018).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남순 외(2018).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https://www.kihasa.re.kr>
- 경상남도 홈페이지(2021). <https://www.gyeongnam.go.kr>
- 고성군 홈페이지(2021). <https://www.goseong.go.kr>